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락에 외압 느꼈다"

대통령에 "한사람 군인 억울함 외면마시길 국가안보실 결과 보고 요구에 수사중이라 거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락해 혐의자를 제의하라고 한 것에 대한 항명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보실의 자료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 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지도 모르고 정무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반 경 국방부 검찰단 앞에 선 박 대령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경솔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반 경 국방부 검찰단 앞에 선 박 대령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경솔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반 경 국방부 검찰단 앞에 선 박 대령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경솔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연락을 외압으로 느꼈다고도 했다. 박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지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했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연락을 외압으로 느꼈다고도 했다. 박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지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했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다"고 밝혔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연락을 외압으로 느꼈다고도 했다. 박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지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했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단 "수사 거부, 군사법 신뢰 저하는 부적절한 행위"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사령부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계환 사령관은 7월 31일 오후 4시 참모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지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며 "박 대령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사령관명 및 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군사법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사령부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계환 사령관은 7월 31일 오후 4시 참모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지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며 "박 대령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사령관명 및 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회 찾아 국립의원법안 통과 호소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국립의원법안에 대한 연내 통과 및 유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은 전북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남원 국립의원 설립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당위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기획되었다.

공공의대 특위는 먼저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이종석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전주담 차원에서 공공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우선 국립의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길 요청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며 최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과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김은이 국회의원을 만나서 위원회 차원에서 국립의원 법률안 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유치 호소했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과 12월에 남원 공공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도민의 염원을 알리고자 필요성 방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소속 의원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재 위원, 김정수 위원, 김만기 위원, 이병철 위원, 황영석 위원, 내외권 위원, 오은미 위원, 김명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집행부 승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0일 인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고받고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그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군산시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장장 1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청문의 주요 목적은 군산시민발전추진위원회 대표이사인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사정검증이며,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채택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군산시의회가 실시한 첫 청문회인 만큼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능력있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발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민주 "잼버리 파행, 尹 '3無' 국정운영의 상징" "잼버리 파행 사태 깊이 사과 신속한 국조로 시비 가려야"

"尹정부, 실제 대화 운영 준비·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 文정부·전북도 책임론에 반문
"잼버리 대회서도 컨트롤타워 부재 드러나...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韓 총리가 책임질 일 여당 자체 검찰·감사원 감사에 의문... 이번 실패 교훈 삼아 국회사원 등 철저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명을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잼버리 개막 이후 미흡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여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며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북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도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했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뒤엎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화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지원을 총괄한 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에게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태원 참사와 공평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겐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번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영동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며 "이번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정발 연치가 있다면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는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뉴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 사진)이 13일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사과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허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번창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안단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라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5인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 사진)이 13일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사과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윤덕 의원은 "5인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스

김제시의회, 새만금 비전 발전방향 정책연구 착수

김제시의회가 지난 11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를 초빙해 '새만금 비전과 발전 방향 정책연구회'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김영자 의장을 포함한 오승권 대표의원 등 총 13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정책연구회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귀속 결정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적극 파악 △해외와 국제의 유사사태 연구 개선 방향을 제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헌법·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내용의 문제점 검토 등이 논의됐다. /김제=곽도태 기자